

“개헌, 20년만의 기회...역사적 책무 하는 것”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 인터뷰 오주승 정치부장

노무현 대통령이 3월 초 '4년 연임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개헌 카드가 물고 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대통령은 수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야권은 개헌 논의 자체를 정략으로 규정하고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헌 카드가 올 대선의 주요 쟁점이란 것만은 분명하다. 또 오는 25일로 출범 4년을 맞는 참여정부의 공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하다.

광주일보는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개헌의 필요성과 참여정부 4년에 대한 소회를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지난 6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2시간동안 진행됐다.

-노 대통령의 개헌안 제의가 정략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4년 연임제 개헌안은 현재의 정국이 한나라당에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략적일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은 개헌을 통해 노 대통령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 연장을 위해 개헌에 나서는데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지만 다음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개헌에 나서는데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다.
 -개헌이 그토록 절박한가.
 ▲20년만에 찾아온 기회다. 개헌의 필요성이 있고, 여야가 주장했던 일이다. 이를 방지한다면 역사적 추궁이 있을 수 있다. 참여정부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혼란, 경제·사회적 혼란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해마다 큰 선거를 하는 것 때문이다. 지금 개헌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는 큰 국정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제1당인 한나라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국회, 국민의 '선택 절차' 보장해야 진정성 알려지면 지지율 높아질 것

▲유신체제도 아니고...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에 합구령을 내리는 것은 언센스다. 또 이를 따르는 의원들이 있으니 한편의 희극이며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 수권을 꾸꾸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개헌 문제에 대해 주관권을 뺏기기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가, 옳고 그른가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

-개헌안을 발의해도 현 상황으로는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나.
 ▲꼭꼭 숨어 있는 난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상황은 변할 수 있다. 특히 국회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개헌은 주관권을 뺏길 문제가 아니다. 야당도 앞으로 개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도 높지 않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25% 가량이 '노 대통령이 한번 더 대통령을 하기 위한 개헌'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확산되고 개헌 제의의 진정성이 알려지면 지지율도 높아질 것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 '객관적 경제 지표는 어디에 내놔도 풀리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지표와는 괴리가 크다.
 ▲경제와 민생은 따로 분리해야 한다. 수출, 1인당 GNP, 증시, 성장률 등 경제적 지표는 실제로 좋다. 그러나 민생 문제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참여정부도 열심히 했으나 양극화로 대변되는 구조적 부분을 확실히 극복하지 못했다. IMF 금융위기 이후 파헤쳐진 민생이 회복되고 후유증이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구태정치 타파, 권위주의 탈피, 지역균형발전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지도는 바닥이다.
 ▲역시 민생 문제가 원인이다. 국민들은 서민 대통령인 노 대통령이



민생을 확실하게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충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양극화에 의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생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 상태이므로 차츰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과거사 정리문제를 두고 '과거와 싸우다 현재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는 과거를 정리하는 마지막 정권이 될 것이다. 일제시대, 6·25, 독재시대를 거치며 국가 공권력은 국가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목적 아래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해원을 이뤄 나가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지 당시 잘못을 끄집어 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를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참여정부에 대한 노골적 비판이 많다.
 ▲극우 세력,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도 공격에 의한 것이라며 자기나라 대통령을 왜곡하고 비방한 세력이다. 그들이 DJ의 집권을 어느 정도 용인한 것은 그들의 잘못으로 IMF위기는 국가부도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즉 5년은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2002년 정권을 되찾을 것으로 생각했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를

승계한다는 점은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참여정부를 대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극우, 기독교 세력은 지난 4년 내내 탄핵과 민생파탄, 경제위기 등 각종 위기를 내세우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 여론의 왜곡을 이끌어 왔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을 보는 지방 주민의 마음은 허탈 그 자체다.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 아닌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기보다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참여정부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인 2003년 10·29 대책에는 지난해 8·31 대책의 내용이 있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부분 완화됐다. 정책이 신뢰를 잃자 이 과정에서 유동성 투기 자금이 부동산에 대거 유입됐다. 그러나 이제 투기 잡을 장치는 다 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대미 관계 등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6·25 전쟁 이후의 한·미 관계는 일방적 관계였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았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이제 성인이 됐으므로 한·미 관계도 발전적으로 진화해야 한다. 작편권 회수, 미군기지 이전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도 6·25 전쟁 와중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방적 한미관계의 관성에 젖어 있는 분들은 '왜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느냐'고 따진다. 미국과의 협력체제는 공고하다. 6자회담을 잘 풀어나가고 있고 한미 FTA도 진행중이다. 참여정부가 국제외교 분야에서 '외토리'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외토리인 나라가 UN 사무총장을 배출할 수 있겠느냐.
 -언론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다. 그러나 언론도 권력이다. 유착이 이

부동산 정책은 실패 아닌 시행착오 지역균형발전 후퇴하는 일 없다

뤄져서는 안된다. 일부 언론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심판이 아닌 선수로 나서 직접 권력 창출에 뛰어들고 있다. 참여정부는 언론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언론의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한 것 뿐이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은 받아들인다.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수도 조성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다음 정부에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행정도시 기공식은 이르면 7월께 이뤄진다. 기업·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방향은 확정된 것이다. 어느 대선 후보가 지방 살리는 사업을 반대하겠느냐. 오히려 확대한다고 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뒤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행정도시나 기업도시의 경우 이제 계획이 수립되고 법제화가 된 지 2년이 지났을 뿐이다. 다음 정부 중반기부터 효과가 느껴질 것이며 오는 2012년에는 결과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여수박람회, 서남권 발전 계획 등 호남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지원율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여수 엑스포 유치 보고회에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수엑스포 유치가 성공하면 외교통상부의 숙원사업을 다 해주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여수 엑스포 유치 의지는 이 정도로 강하다. 서남권 발전 계획도 내가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을 때 대통령이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사항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도 대통령이 결단한 사항이다. 특히 호남고속철이 완공되는 2017년은 서남권 발전 사업의 1차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호남고속철도와 서남권 개발 사업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다.

/정리=임동욱 서울취재팀장 tuim@kwangju.co.kr
/사진=위키키가자 jrwi@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코흘리개를 위한 클래식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6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은 꼬마 관객들로 북적거렸다. 이날 아이들은 '백설공주' 등 어린이뮤지컬 속 주인공을 만나 온 게 아니다. 이날 만큼은 꼬마들도 어엿한 '클래식 공연'의 관객이었다.

'스피리 앙상블'이 3세 이상 아이들을 위해 진행한 이날 공연은 철저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무대였다. 아이들은 트럼펫, 트럼본으로 연주하는 '강강' '울렁 울렁' 등 클래식과 동요를 들으며 웃고 떠들고 즐거워했다.

엄마들도 만족해했다. "클래식 연주회에 아이를 데려가는 게 부담이었는데 딱 아이들을 위한 음악회라 만족스럽다" "아이가 떠들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좋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요즘 엄마들은 아이를 교육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한글과 영어는 물론이고 음악이나 미술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7세 이하는 클래식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입장을 강행하기도 한다.

일반 클래식 공연에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어른 관객, 아이 모두에게 고역이다. 자리를 잘못 잡을 경우 음악만큼 많이 듣게 되는 소리가 엄마가 아이에게 해대는 '뿔'하는 소리다.

얼마전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성인이 듣기에 도박한 대작인 '말러교향곡' 연주회에서 안달을 해대던 아이를 보며 꽤 유명한 전시회에서 접한 풍경이 떠올랐다.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를 데려온 엄마는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말해보라며 아이를 다그쳤다. 바로 옆에서 그림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또래 아이를 보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엄마의 소리를 질렀고 결국 아이는 울음을 터트렸다. 엄마의 욕심이 아이의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기억이 있다.

공연장에서 만난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광주에서 이런 종류의 음악회를 만날 기회는 거의 없다. 이번 음악회 역시 기획사, 연주단체 모두 서울 팀이었다. 광주 지역 기획사와 연주자들이 분발해야 할 대목이다.

광주시장이 매월 마련하는 '화요음악회'에서 방학 등 1년에 몇차례는 아이들을 위한 음악회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음악인 김찬경 씨가 제안하는 아이가 클래식과 친해지는 방법 하나. 보통 엄마들은 아침이면 습관적으로 TV를 켜다. 김씨는 하루종일 클래식을 듣는 게 조금은 지루하다면 아이가 일어날 시간만이라도 TV 대신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KBS FM라디오에 채널을 고정해 두라고 제안한다.

아이에게 어떤 음악을 들려줄까 고르는 게 부담인 엄마들에게 FM라디오는 좋은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엄마의 감성도 풍부해 지는 건 덤으로 얻는 행복이다

/mekim@kwangju.co.kr

우리 가족 활력에너지
베콤씨

아침, 저녁 하루 두번 우리 가족의 힘- 베콤씨
베콤씨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아티킨산은 수용성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www.wida.co.kr